

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이행현황

분야	연번	정책화 과제	소관부처
1. 취약계층	1	취약계층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등	복지부
	2	에너지바우처로 등유 구매시 배달료도 결제 가능	산자부
	3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 연장	산자부
	4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보증금 대출 지원	금융위
	5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내실화	복지부
	6	지하철역 점자안내판에 출입구번호 표기 의무화	국토부
	7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방안 검토	복지부
2. 소상공인·자영업자	1	상가임대료 인상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	법무부
	2	자동차 옥외광고 규제 합리화	행안부
	3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	여가부
	4	술담배 구매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강화	여가부
	5	자영업자 고용보험 통합안내 서비스 강화	노동부 등
	6	영업 양도양수 시 양도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알지 못한 선의의 양수인 보호	산업부 등
	7	귀농 지원사업 요건 개선	농식품부
	8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인택시 면허 양수교육 개선	국토부
	9	임야 양봉 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화	농식품부
3. 출산·육아	1	난임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시술받는 날부터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2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확대	복지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범위 확대	노동부
	4	다자녀 가구에도 돌봄교실 우선 신청자격 부여	교육부
	5	다자녀 국가장학금 전액지원 대상 탄력 적용	교육부
	6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지원비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없이 지원	여가부
	7	한부모가족의 자녀의료급여 신청부담 완화	복지부
4. 청년·일자리	1	지방자치단체 청년지원사업 대상 사각지대 해소	광역지자체
	2	청년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신설 등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국토부
	3	청년기업에 대한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강화	광역지자체
	4	국민내일배움카드 원격교육과정 확대	노동부
	5	기업 채용공고 시 경력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폐지 유도	노동부
	6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제한 개선	경찰청

5. 생활불편(행정)	7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연령 확대	노동부
	1	운전면허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경찰청
	2	제1종 보통(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 자동차 면허체계 개편	경찰청
	3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경찰청
	4	소유자 본인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법원행정처
	5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통지 및 환급 절차 마련	행안부
	6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금융위
	7	카바이드 폭음기 소음을 줄이기 위한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부
6. 생활불편(가족)	8	예비군 훈련 급식 품질 개선	국방부
	1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검토	교육부
	2	14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본인인증(아이핀 발급) 불편 해소	방통위
	3	별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1인의 동의만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전학서류 간소화	교육부
	4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	행안부
	5	반려동물 진료기록부 열람 허용	농식품부
	6	일부 국립공원 반려견 동반입장 시범사업 실시	환경부
7. 안전	7	다자녀 가족이 투숙할 수 있는 호텔 정보 공개	문체부
	1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	국토부
	2	‘도로 위 흥기’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개조 근절	국토부
	3	전통시장 화재안전 실효성 제고	중기부 등
	4	전기차 음향발생장치 장착 활성화	국토부
	5	헌혈증 예비군 교육훈련 실적 인정방안 검토	국방부
	6	차량신호등 녹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 시범 설치	경찰청
8. 공정·알권리	7	우회전 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개선	경찰청
	1	법인 명의 회원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국세청
	2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특정기업 위주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광역지자체
	3	국립대학교 학생지도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교육부
	4	과도한 게임물 등급분류 규제 합리화	문체부
	5	기업 채용공고 시 근로조건 등 공개 확대 유도	노동부
	6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점수 공개기준 마련	행안부
	7	미용사 등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노동부
	8	의무경찰 국가유공자도 국군복지시설 이용 허용	국방부

※ 이행완료 과제

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60개 상세 내용]

1. 취약계층	1
2. 소상공인 · 자영업자	4
3. 출산 · 육아	9
4. 청년 · 일자리	12
5. 생활불편(행정)	16
6. 생활불편(가족)	20
7. 안전	23
8. 공정 · 알권리	27

[취약계층 7건]

1. 취약계층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연체금 징수 예외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황) 건강보험은 재해·사고 등 경제적 곤란을 겪는 가입자에 대해 분할납부, 보험료 경감 등을 지원 중이나, **보험료 체납·압류 방지를 위한 납부유예 제도는 없음**

(개선)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연체금 징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 마련

※ 현재 코로나19 특별고용업종(15개 업종)을 대상으로 적용 중인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적용방안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으로 확대

 **보건복지부 / 이행 중**

* 연구용역 등을 통해 대상 집단 선별, 재정 영향 추계 등 세부검토 진행

A씨는 코로나로 지난 1년 동안 실직 상태로, 소액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현재 여건에서는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체납처분으로 통장이 압류당하는 바람에 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정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취약계층에 대해 보험료 체납 후 재산 압류로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와 연체금 징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소득 100만원 미만의 생계형 보험료 체납 세대가 전체 체납 세대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현황) 최근 등유가격 상승 등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가 구매한 **소량 등유에 대해 배달을 거부하거나 별도 현금 배달비를 요구하는 사례** 등 발생

※ [참고] 에너지바우처(27만 8,600원, 4인 기준) < 등유 드럼당 가격(35만~40만원 수준)

*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 추이 : '17년 9.9% (50억원) → '21년 17.2% (167억원)

(개선)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형편을 고려하여 **에너지바우처로 배달비 지급 허용, 배달거부 근절을 위해 석유판매업자에게 제재조치 안내** 등 주의 환기

 **산업통상자원부 / 이행 완료**

지체장애인 B씨는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위해 주유소에 등유배달을 요청하였지만, 주유소는 200리터 기준(35만원~40만원) 이하이면 수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달을 거부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생계 곤란자를 지원하는 유용한 복지혜택이나 현실에서는 사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에서 배달 요청시 바우처로 배달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3. 취약계층 겨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현황)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되는 **에너지바우처의 사용이 4월 말까지만 가능해**, 사용기한 도래 전 남은 금액을 소진해야 하는 실정

※ 겨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10.1. ~ 4.30., 지원금액 : 597,500원(4인 이상 세대, '23년)

(개선) 시스템 고도화, 운영 인력 확대 등 바우처 업무 효율화를 통해 **겨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 연장 (4. 30. → 5. 25. 청구분)**

☞ **산업통상자원부 / 이행 중**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 도시가스 요금을 차감받고 있다. 아직 바우처가 몇 만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월 사용요금이 바우처에서 차감되지 않고 부과됐다. 확인해보니 4월 말까지 요금고지서에 청구된 금액만 차감이 된다고 한다. 추운 겨울 아껴가며 사용했고, 에너지바우처 금액이 남아 있는데도 혜택을 볼 수가 없었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사전 준비기간을 단축하여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을 1달가량 연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한 가정에서 미사용금액이 소멸되는 상황을 막아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겠습니다.

(현황) 영구임대주택(가군) 신청 대상인 최저소득 계층의 경우, 약 200~300만원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마련·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음

* 가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 (예)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전용면적 40㎡ 이하, 보증금 300만원/월임대료 10만원 이하

(개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우대 보증요건을 적용한 **전용 보증금 지원 프로그램** 마련

☞ **금융위원회(주택금융공사) / 이행 완료**

B씨는 60대 기초생활수급자로 월세 20만원 원룸에 살고 있다. 월세 부담을 줄이려고 LH에서 운영 중인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 했으나, 보증금 2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에 급히 목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입주 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영구임대주택 입주 예정자도 정책금융기관 보증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대출받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보증금 부담으로 임대주택 입주에 어려움을 겪었던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현황)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도 증가 추세나, **혈연 중심의 장례절차, 지자체별로 다른 공영장례 규정 등 취약계층 장례복지 지원체계는 미흡**

* 무연고 사망자(명): ('13년) 1,280 → ('17년) 2,008 → ('21년) 3,603

(개선)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 보장을 위해 ▲연고자 외 **장례주관자 범위 확대** ▲지자체 **공영장례 표준모델 정립** 등 추진

※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발표('23.1.6.), 장례주관자 범위 확대를 위한 「장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23.2월)

☞ **보건복지부 / 이행 완료**

A씨의 친한 친구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A씨는 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가 없는 친구를 위해,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도록 시신을 인수하여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다. 하지만, A씨는 가족·친족이 아니어서 직접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고, 장례업체에서도 법적 연고자가 아니어서 장례를 맡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무연고자가 생전에 지정한 사람이나 함께 하던 지인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단위의 공영장례 표준모델도 마련키로 하였다. 한해 3,000명이 넘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고, 죽음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장사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지하철 역사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표기를 의무화하겠습니다.

(현황) 지하철 역사에 **점자안내판 설치와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위치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출입구 번호는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불편**

※ 전국 258개 도시철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시설 점자 표시 현황(국토교통부, 2020)
: 벽면 24.3%, 복도 손잡이 43.1%,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45.1% 등

(개선)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편의 증진**

☞ **국토교통부 / 이행 중**

시각장애인 B씨는 목적지인 OO역에 도착 후 약속 장소로 나가는 출구를 찾지 못해 30분 이상을 헤매다가, 결국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야만 했다. 역사 내 설치되어 있는 점자를 만져 보았지만, 점자가 훼손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

정부는 전국 260여개 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위치, 출입구 번호 등의 정보가 정확히 안내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점자안내판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 최종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가족활동지원 허용을 검토하겠습니다.

(현황) 가족 외에는 돌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외부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워 서비스 이용이 곤란한 실정

* 장애인 활동지원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서비스

※ 서비스 대상자 14.6만명, 시간당 서비스 단가 15,570원(보건복지부, 2023)

(개선) 장애인 개별의 특수성 및 환경적 요인으로 가족 외에는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검토

☞ 보건복지부 / 이행 중

A씨는 중도·중복 장애가 있는 딸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제껏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으며 어렵지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의 도전적 행동이 심해지면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워졌다. 아이를 24시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경제적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살길이 막막할 뿐이다.

앞으로 최종증 발달장애인 등 그 특수성으로 가족 외에는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많은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9건]

1.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편법적인 관리비 인상을 방지하겠습니다.

(현황) 코로나19 이후 임대수요 회복 등을 배경으로, 일부 건물주가 법상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해 관리비 등을 대폭 인상하는 사례 발생

*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보증금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

(개선) 관리비 등의 범위, 여타 「주택임대차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상가 임대차계약에 관리비 산정방식 및 기준 명확화 등 추진

☞ 법무부 / 이행 중

A씨는 월세 120만원, 관리비 5만원에 상가를 임차하여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최근 임차계약 갱신 시기가 도래하자 건물주는 월세를 18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법상 월세는 5% 초과 인상할 수 없다고 하자, 건물주는 대신 관리비를 7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건물주의 요구를 납득할 수 없던 A씨는 관리비 세부 내역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정부는 이처럼 임대료 증액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임대차계약시 관리비 산정방식 명확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편법적 관리비 인상을 차단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2.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자동차 옥외광고 규제가 합리화됩니다.

(현황) 자기 소유 자동차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자동차 옆면(창문 제외 면적의 1/2 이내)만 활용 가능하고 ▲본인 관련 사항만 광고할 수 있음

(개선)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의 광고면을 확대(앞·뒷면)하고 ▲진행 중인 규제샌드박스* 종료 이후 자기 소유 자동차의 타사 광고 허용도 검토

*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20년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행정안전부 / 이행 중

개인사업자 B씨는 운영 중인 업체명, 사업내용, 전화번호 등을 자기 자동차 뒷면에도 표시하고, 홍보 효과를 위해 캐릭터 그림도 부착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자동차 광고규제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정부는 앞으로 자동차 광고 표시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사업용 자동차와 함께 자기 소유 자동차도 표시할 수 있는 광고면을 확대하고, 자기 소유 자동차에 타사 광고 허용 여부도 현재 진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가 끝나는 대로 검토할 예정이다. 규제가 합리화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단속 걱정을 덜고 자기 사업을 광고할 수 있게 되고, 타인의 차량을 이용해 광고하려는 사람에게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3.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을 허용하겠습니다.

(현황) 금연구역 지정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등 PC방의 유해환경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PC방에서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는 상황

* 간접흡연 및 유해매체물 노출 등의 이유로 PC방 청소년 고용 금지('12.9.~),

※ '21년 기준 전국 PC방 개수 : 9,265개 (대한민국게임백서, 문체부·한국콘텐츠진흥원)

(개선) PC방에서의 청소년 근로환경이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낮시간대*에 PC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 추진

* PC방 청소년 출입시간 : 오전 9시 ~ 오후 10시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

 여성가족부 / 이행 중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다. 마침 방학도 다가오고 어려운 가정형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지만 PC방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여 PC방에서 일할 수 없었다. 오토바이 배달, 음식점 아르바이트보다 PC방이 오히려 청소년에게 더 안전할 듯 싶은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정부는 주로 청소년들이 PC방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PC방 내 근로환경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PC방 청소년 고용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국 약 1만개의 PC방 점주들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술·담배 구매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현황)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점에 대한 처벌(영업정지, 벌금, 과징금 등)에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을 통한 **청소년들의 술·담배 구매행위 지속 발생**

※ 청소년 '평생 흡연 경험률' 8.9%, '평생 음주 경험률' 34.2%
(‘22년 4월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상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질병관리청)

(개선)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방안 검토, ▲**영업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도록 지자체 안내**

 **여성가족부 / 이행 중**

식당을 경영하는 B씨는 최근 억울한 일을 겪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서 과징금 690만원을 물어야 했다. 분명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위조 신분증이었던 것이다. 미성년자를 철저히 가려내려고 온 신경을 쓰지만 위조 신분증을 내미는 청소년에게 손쓸 여지가 없다.

정부는 청소년이 성인인 것처럼 점주를 속이고 술·담배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술·담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고 선의의 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자영업자 고용보험 통합 안내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현황)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기관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안내하고 있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여도 **고용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 확인이 곤란**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 (고용센터) 실업급여, (소상공인진흥공단) 보험료 지원 등

※ '22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현황
: 4.3만여 명, 전체 자영업자 569만여 명 중 0.75%(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행정통계)

(개선)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어느 쪽에 문의하여도 제도 전반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를 강화**하고, 각 기관 운영 **홈페이지에도 상세한 정보 모두를 게재**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 이행 중**

A씨는 아내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최근 뉴스를 통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전화기를 들었으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각각 소관 업무가 다르다는 것이다. 홈페이지에도 소관 업무만 있어 보험료는 얼마인지, 가입 후 구체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답답했다.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전국 고용센터 등 어느 기관에 문의하더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반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569만여 명의 자영업자가 더욱 편리하게 고용보험을 안내 받고, 사업 경영상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원활한 영업 양도·양수 환경 조성 및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겠습니다.

(현황) 행정제재 처분 회피 방지를 위해 양도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양수인이 승계토록 규정되어 있어, 선의의 양수인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

※ 「전기사업법」 등 44개 법률에서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규정 미비

(개선)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마련 및 양도인의 법률 위반 사실 제공 규정 신설

 산업자원통상부 등 / 이행 중

두 달 전 OO주유소를 인수한 B씨는 최근에 전 사업주가 가짜 석유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더욱이 전 사업주의 가짜 석유판매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을 B씨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B씨는 주유소를 양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양도양수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시청 직원도 몰랐던 전 사업주의 위법 사실을 B씨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정부는 양도·양수로 인해 부당하게 행정처분 효과가 선의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에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위법행위 등을 알려주어 양수인이 안심하고 양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더는 선의의 양수인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7. 소규모 임대사업자도 귀농(歸農)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귀농 지원사업 요건이 개선됩니다.

(현황) 귀농 지원사업의 요건으로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 등록이 없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제외됨

* [참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을 위해 농업창업에 필요한 농지, 시설 등 구입비용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

(개선)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자·연금소득 등)이 있는 분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임대사업자 등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자에 대한 지원 제한 완화

※ 최근 귀농인의 겸업률도 증가 추세: ('19) 48.6% → ('20) 50.1% → ('21) 57.6%

 농림축산식품부 / 이행 완료

A씨는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귀촌을 결심하고, '23년 하반기 귀농귀촌 지원을 받기 위해 개인사업도 폐업 정리하고 관련 교육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에 3억 5천만원 빌라를 전세 임대한 임대사업자라는 이유로 귀농 창업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임대사업을 철회하고 귀농 신청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A씨는 연금소득이 거의 없어 소규모 임대소득이 최소한의 노후 소득이며 귀농 사업 신청을 위해 임대사업을 철회한다면 그에 따른 위약금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타 산업 종사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에 대한 귀농 창업자금 지원 제한이 합리적으로 조정 또는 완화된다면, A씨와 같은 소규모 임대사업자도 귀농을 원하는 경우 귀농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귀농귀촌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8. 실수요자가 먼저 개인택시 면허 양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개인택시 면허 양수교육*(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인터넷 접속 폭주와 조기 마감으로 교육 이수자가 사실상 불가능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늦어지는 실정

* 교육 대상 : 교육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개선) 개인택시 양수교육 유효기간 일시적 단축 등 면허 양수 일정이 정해진 실수요자가 우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 검토

※ '22년 양수교육 수료자 : 6,269명, 교육 이수 후 '22년 양수자 : 4,745명(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 이행 중

취업난을 겪던 B씨는 최근 1년간 개인택시를 하려고 준비해왔다. 마지막으로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22. 12월, '23. 4월, '23. 8월 세 차례 모두 인터넷 사이트 교육 신청에 실패했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접속이 늦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인택시 영업 실수요자가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을 우선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 과정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간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개인택시 양수교육 예약 때마다 신청자들의 인터넷 접속이 집중돼 적기에 교육 수강이 이뤄지기 어려웠던 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9. 농지가 아닌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현황) 농지가 아닌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하여 양봉 농가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우려

※ 꿀벌 사육 가구수 : 27,583개('21.12월, 농림축산식품부)

(개선) 연간 꿀 판매액 120만원 이상을 증빙하는 경우 농지가 아닌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농림축산식품부 / 이행 중

A씨는 작년 3월 고향에 내려와 임야를 임차해 양봉업을 시작했다. 올해 들어 벌 떼가 30여 군이 되어가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해 확인해보니 벌통을 받거나 과수원 등 농지에 놓고 키워야만 등록할 수 있단다. 임야에서 양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해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농지가 아닌 임야에서의 양봉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농지가 아닌 임야에서 양봉을 하는 양봉업자도 연간 꿀 판매액 120만원 이상을 증빙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앞으로 양봉 장소가 임야든 농지든 관계없이 양봉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져 양봉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육아 7건]

1. 난임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시술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현황) 최근 남성 난임 진단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부부의 난임시술 진료 시작일은 여성의 시술일 기준으로 보고 있어 **남성 난임 시술**(고환조직정자추출 등)을 **먼저 시작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

※ 남성 난임 진단자 현황(비율) : ('18년) 78,583명(34.0%) → ('22년) 85,974명(35.6%), 9.4%↑(국민건강보험공단)

(개선) 여성의 시술일 전 동반되는 **남성의 치료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선 검토

 **보건복지부 / 이행 완료**

결혼한 지 4년 차 된 A씨는 작년부터 임신을 준비하며 검사를 받던 중 난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자가 먼저 난임시술을 받아야 한단다. A씨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말이다.

정부는 여성 배우자의 시술이 선행되지 않아도 여성의 시술일 전 동반되는 남성의 치료시술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난임정책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고 개선해 저출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2.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황) 체외수정 보험급여 횟수가 난임시술별로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로 정해져**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상당

* 2022년 환자수 14만 458명에 1인당 진료비 184만 4,354원('23.5.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특히 사실혼부부의 경우, 지원횟수 초과 시 자비로도 난임시술을 받기 어려움

(개선) 신선배아, 동결배아 **난임 지원 간 횟수 칸막이를 폐지**하고, **체외수정 보험급여 횟수도 확대**(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총 16회 → 20회)

※ 체외수정 난임 시술 횟수의 99%가 20회 이내에 해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이행 완료**

B씨는 올해 36살로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고 있다. 정말 간절하게 아이를 낳고 싶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벌써 시험관 8차를 종료하고 이제 9화차가 되어간다. 한 번의 기회만이 남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하다. 사실혼 부부인 B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을 수 없어 자비로도 난임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기존 체외수정 칸막이를 폐지하고 급여지원 시술횟수도 확대(16회 → 20회)하여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시술이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횟수가 최대 25회로 늘어나고, 14만여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시술 보장과 시술비 지원이 가능해져 출산율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현황) 법 개정을 통해 '19. 10월부터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사용자부터 적용함으로써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사용한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누락

*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주당 15~35시간 내 단축근무 신청 가능

(개선) '19. 10월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었던 근로자에 대해서도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 / 이행 중

A씨는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할 앞둔 7살 딸 아이를 둔 아빠다. A씨 부부는 맞벌이로 육아에 대해 고민이 깊던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19. 10월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으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단 하루라도 육아휴직 가능 일수가 남아있어야 한단다. 단 하루 차이로 1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A씨는 크게 아쉬웠다.

이에, 정부는 '19. 10월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었던 근로자에 대해서도 당시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 중이다. 법률이 개정된다면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부모들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어 경력 공백 없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초등 돌봄교실 우선 신청자격을 다자녀가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황) 초등학교 운영 돌봄교실은 저소득·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자녀에게 우선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다자녀가구 등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실정

※ [참고]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는 만 8세 이하 다자녀가구 자녀 포함('20.9월 ~)

(개선) 학교별 여건, 지역별 수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출산 장려 등을 위해 다자녀가구, 임신부 자녀 등으로 초등 돌봄교실 우선 신청자격 확대 추진

 교육부 / 이행 완료

B씨는 8, 7, 5세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둥이 엄마다. 다행히 그동안에는 어린이집에서 돌봄이 가능했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다자녀가구의 자녀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신청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돌봄교실 운영을 초등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다자녀가구 학생들도 돌봄교실에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요즘 다자녀 부모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가정 여건에 따라 셋째가 아닌 첫째 또는 둘째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황)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장학금은 첫째와 둘째는 소득구간에 따라 연 450~520만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첫째, 둘째) 1~8구간 연 450~520만원,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2023년 4년제 대학생 평균등록금 679만5,200원(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개선) 가정 여건에 따라 등록금 전액 지원 자녀를 셋째가 아닌 첫째 또는 둘째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부 / 이행 중**

3자녀를 둔 A씨는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으로 잠을 설친다. 없는 살림에 두 아이를 동시에 대학에 보내다 보니 매년 1,000만 원 이상의 가계 적자가 쌓여간다. 셋째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A씨 집 막내는 대학 진학에 뜻이 없다. 첫째 혹은 둘째가 전액 지원 대상이 된다면 부채를 막을 수 있을 텐데, 제도의 맹점이 아쉽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서 전액 등록금 수혜대상 자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집안 사정에 따라 수혜대상 자녀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그간 셋째 자녀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 받지 못했던 국가장학금을 고액의 학비 부담이 예상되는 자녀가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가 자녀의 고등학생 기간에 중단없이 지원됩니다.

(현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자녀의 연령은 만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 자녀의 생일이 빠른 경우 고등학교 졸업 전에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발생

※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52% 이하 가족 대상,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22년 중위소득 52% 이하 → ’22.10월 58% → ’23년 60%)

(개선)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서는 만 18세가 되더라도 아동양육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여성가족부 / 이행 완료**

A씨는 한부모가족으로 딸 둘을 키우고 있다. 고3인 첫째는 ’04년 7월생으로 만 18세가 되자 아동양육비가 7월부터 중단되었다. 입시를 앞두고 고3 졸업 전까지는 교육비 등 지출이 한창 늘어날 때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지원이 중단되어 A씨는 경제적으로 더 곤란을 겪게 되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는 아동 수가 약 19만명(’22.5, 여성가족부)에 이르고 있는 만큼,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아동양육비가 중단없이 지원되면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적지 않게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7. 한부모가족의 자녀 의료급여 신청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합니다.

(현황) 자녀 의료급여 신청시, 이혼 배우자(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단절된 경우 등은 **요구서류(이혼 배우자 소득재산신고서 등) 제출이 어려워 신청 애로로 작용**

※ [참고]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 폐지되는 추세(예: 생계급여 '21.10, 주거급여 '18.10, 교육급여 '15.9)

(개선)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지원 및 실질적 단절 여부 판단 등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한부모가족 의료급여 신청 부담 완화 방안 검토**

☞ 보건복지부 / 이행 완료

B씨는 이혼 후 딸을 키우고 있는 차상위 수급자(한부모가족)이다. 올해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을 충족하여 주민센터에 신청하였으나,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혼 배우자의 재산등조회동의서도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B씨는 이혼 후 왕래도 없는 전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편과 곤란을 겪었다.

정부는 B씨와 같이 연락이 끊긴 이혼 배우자를 수소문해서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관련 서류 제출이 곤란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시 복지급여 수급 과정에서 한부모가족의 부양의무자 입증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일자리 7건]

1. 지방자치단체 청년지원사업 수혜대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현황) 지자체별 '청년근로자' 지원사업(예: 교통비 지원 등)은 대부분 신청 자격요건이 **▲관내 기업에 근무 중이면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으로 한정**

* 도시 간 광역철도망 확충 등으로 원거리 통근이 일반화된 추세를 반영하지 못함

(개선) 지자체 간 업무협약 등을 통해 관내 거주지 주소를 두고 **인근지역 소재 기업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예: 경기도 거주 ↔ 서울 출·퇴근)를 지원대상에 포함

☞ 서울, 대구, 전북, 광주, 전남 등 5개 지자체 기준 / 이행 완료

89년생 청년 A씨는 ○○시에 살면서, 직장은 □□시에 있어 지하철로 매일 출퇴근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청년지원 혜택을 확인하고 A씨는 ○○시와 □□시에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어느 곳에서도 청년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실거주지와 직장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다.

주민등록지와 근무지 소재 지역이 다른 경우에도 다양한 청년지원사업 지원이 확대 적용된다면, A씨와 같이 거주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원거리 출퇴근을 하는 많은 청년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청년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등을 통해 청년층 주거지원을 강화합니다.

(현황) 20대 세대주가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정책대출(모기지)이 제한적이고, 미혼 청년층 대상 주택공급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

※ [참고] 20대 이하 1인 가구는 141만 8천명으로 전체 1인 가구의 19.8%

(개선)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공공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전용 모기지 신설 ▲생애 최초·신혼부부 대출한도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 주거사다리 복원

* [대출한도 확대] 생애최초 : 2 → 3억원, 신혼부부 : 3 → 4억원

 국토교통부 / 이행 완료

사회초년생 직장인 B씨(28세)는 부양가족이 없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기간도 짧아 번번이 일반공급 당첨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청년 특별공급을 통해 직장 근처에 주택을 분양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C씨(32세)는 고금리 여건에서 초기 목돈이 없는 청년층은 주택구입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에 저금리의 전용 모기지(최저 1.9%, 최대 40년 상환)를 제공함에 따라 초기비용 부담을 줄이며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겼다.

3. 청년기업에 대한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황) 지자체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정에서 모든 기업에 동일한 이차보전금리를 적용하여, 낮은 신용도, 대출 조건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인 영세기업, 청년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미흡

※ 기본 대출금리 - 이차보전금리(지자체 부담) = 기업부담 대출금리

(개선) ▲대출금리 구간별 이차보전금리 차등 지원, ▲이차보전금리 추가 지원, ▲직접 지원 확대 등 영세·청년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 이행 중

A씨는 창업한 지 3년차 된 20대 청년기업가이다. A씨는 OO도로부터 정책자금 지원 결정통보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이 서류를 본 신용보증재단은 부채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증서 발급을 거부했다. 어떤 기준으로 부채율이 높은지 설명도 없이 2년치 재무제표로는 판단이 어렵다고만 한다. 설립 5년 미만 창업기업은 사실상 대출이 쉽지 않다.

현행 일률적·기계적 지원방식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금리 구간별 지원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규모를 고려한 대출금리 구간별 이차보전금리 차등 지원 등으로 영세·청년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내일배움카드 원격교육과정을 확대하겠습니다.

(현황) 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정(직업훈련포털 HRD-Net 제공) 중 **선호도가 높은 콘텐츠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적 편차 발생**

* 국민 누구나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

※ 내일배움카드 발급현황 : (서울·경기) 40,357명, (그외 도시) 40,680명('23. 8월, 고용행정통계)

(개선) ▲수강생들이 원하는 **양질의 원격훈련 콘텐츠 확대**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을 수요자 친화적(User-Friendly)으로 개편 ▲재직자 중심의 원격훈련에서 벗어나 **검증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직자 대상 원격훈련 확대**

 **고용노동부 / 이행 중**

구직 중인 B씨는 얼마 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내일배움카드로 수강 가능한 00시 인근의 학원을 검색해본 결과, 관심 분야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곳은 서울이나 대도시뿐이었다.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하루 왕복 2만원 이상의 교통비를 감당해야 하는데, 현재의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정부는 구직자분들이 원하는 양질의 원격훈련 콘텐츠를 확대하고,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을 수요자 친화적(User-Friendly)으로 개편하여 지방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재직자 중심으로 제공되던 원격 훈련에 대해 검증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직자에게도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지방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4만여 명의 수강생들이 편리하게 양질의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경력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폐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황) 발급 시점에 따라 진위 변동이 없는데도 **채용공고 시 경력증명서 등 각종 제출서류를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요구하고 있어 청년 등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부담**

(개선) 공정채용 컨설팅·가이드북 및 인사담당자 교육 등 공정채용문화 지원사업을 통해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방안 적극 검토**

 **고용노동부 / 이행 중**

A씨는 인근 학원의 강사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경력증명서는 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고 한다. 채용 응시를 위해 3개월마다 이전 직장에 찾아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이 지연되어 채용 응시를 포기해야 했던 적도 있다.

정부는 그간 민간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요구했던 ‘3개월 이내’라는 경력증명서 발급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공정채용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구직자들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던 업체들의 업무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현황)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은 '약도 색약을 제외한 색각이상이 아닐 것'으로 색맹 및 중도 이상 색약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

※ [참고] 소방공무원은 중도 이상의 색약자라도 적색약이 아니면 결격사유 아님

(개선) 경찰업무 직무분석을 통해 ▲전문성 요구 직위 또는 ▲현장과 연관성이 적은 직위 등을 일반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색각이상자의 경찰근무 기회 확대

☞ 경찰청 / 이행 중

B씨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에서 '중도 색약' 판정을 받아 탈락해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경찰공무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B씨는 지금까지 자신이 약도 색약인 줄 알고 있었고, 평소 일상생활에도 별다른 불편을 느낄 수 없었다. 단순히 색약이라는 이유로 채용시험에서 탈락시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우리나라 남성의 약 5.9%, 여성의 약 0.4%가 색각 이상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질병관리청). 정부는 경찰 업무 중 엄격한 신체기준이 요구되는 현장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보다 세밀하게 구분하고, 현장 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업무 등에 대해서는 색각 이상자에도 채용의 문을 적극 넓혀 갈 계획이다.

7. 지역·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을 확대하겠습니다.

(현황)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연령은 만 15~34세로 만 35세 이상은 제외

(개선) 맞춤형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인력수급 미스매치가 있는 지역·산업별(예: 조선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지원 내실화

※ '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제조업·건설업 50인 미만 기업에 한정함으로써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해 나갈 예정

☞ 고용노동부 / 이행 완료

A씨는 40세의 나이로 조선업 사내 협력사에 재취업하였다. 취업난으로 여러 번 면접에서 탈락했으나, 지역 기술연수원에서 조선업 기술훈련 수료 후 협력사 취업에 성공했다. 낮은 임금수준과 불안정한 고용 여건 등에도 불구하고,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1년 근무하면 600만원의 목돈 마련의 기회도 얻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높은 입직 연령(30대 중후반 이상), 짧은 근속기간, 사내 협력사 간 잦은 이동 등 조선업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청년내일채움 공제 사업의 지원대상(만34세 이하)을 확대하였다. 또한, 기업의 근로자 납입금 지원(450만원) 등을 통해 자산형성과 근속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불편(행정) 8건]

1.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자영업자 등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장 토요일 운영을 확대합니다.

(현황) 코로나19 이전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월 1회 토요일 운영을 실시했으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대폭 축소('21년 9개 시험장, 31회 → '22년 5개, 12회)

(개선) 시험대기·적성검사 갱신 등 권역별 수요, 면허시험장별 인력운영 여건 등을 감안 하여, 운전면허시험장 토요일 근무를 순차적으로 확대

 경찰청(도로교통공단) / 이행 완료

직장인인 A씨는 운전면허시험을 보기 위해 하루 연가를 낼 수밖에 없었다. 토요일에도 가능했던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간을 마음대로 낼 수 없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도 편리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시험응시 수요, 인력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말 운전면허시험장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해 190만명('21년, 도로교통공단)에 달하는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들이 보다 편리한 시간을 선택하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제1종 보통(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 자동차 면허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현황) 최근 자동변속기 차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동변속기(오토) 면허는 제2종 보통면허에서만 허용

※ [참고] 전체 차량에서 자동변속기 차량이 80% 차지('21년 기준) → 승용차 뿐만 아니라 승합차(68%), 화물차(39%) 등에서도 증가 추세

(개선) 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1종 보통(자동변속기) 면허 신설을 포함한 '자동차 면허체계 개편방안' 마련

 경찰청 / 이행 중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B씨는 7년 무사고 경력이 있지만 제2종 '자동' 면허이기 때문에 제1종 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없었다. B씨는 가족 여행을 위해 10인승 초과 캠핑카 구입을 계획하고 있지만, 제1종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더구나 한 번도 운전해 본 적 없는 수동 면허 취득이 부담되어 주저하고 있다.

1종 보통면허에서 자동 면허가 신설되면, 자동변속기가 달린 승합차(자영업자, 학원 등)나 캠핑카를 운전하려는 국민들의 면허 취득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 안전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여 도시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현황) '21년부터 시행 중인 '도시 속도제한(어린이보호구역 등)' 정책이 보행자 통행량, 도시 내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경직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

(개선) ❶ 보행자 통행량이 적고, 사고위험이 낮은 구간 **제한속도 상향**(50→60km/h)

❷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간대별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 등 전국 확대 검토

❶ '22년까지 76개 구간(190km) 속도 상향 완료 → 33개 구간(56km) 추가 개선 착수

❷ 현재 진행 중인 시범운영(11개소) 및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전국 확대방안 등 검토

👉 **경찰청 / 이행 중**

A씨는 지난 2월 새벽 2시경 편도 4차선, 왕복 8차선 0000대로에서 62km/h로 교차로를 통과하다 카메라에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야간이라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차량 통행도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속도제한은 필요하지만, 도로 환경이나 교통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규제만 하는 것이 능사인지 답답함을 지울 수 없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여, 도심 차량속도 제한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말 일부 속도제한을 조정한 데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에 탄력적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향후 시범사업 결과,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활한 교통 흐름이 유지된다면 운전자 불편도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4. 소유자 본인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하겠습니다.

(현황)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등은 온라인 발급 수수료가 무료인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열람 700원, 발급 1천원) 납부**

※ '22년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 유인·무인 6백만건, 온라인 106백만건(법원 등기정보광장)

(개선)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모바일 발급서비스 시행과 함께, **소유자 본인에 한해 전자 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 **법원행정처 / 이행 완료**

B씨는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등기소 방문과 마찬가지로 발급수수료 1,000원을 납부해야 해서 매우 의아했다. 다른 많은 공적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수수료가 무료인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여전히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이 형평성에 맞는지, 시대 흐름에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

법원은 소유자 본인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무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무료 발급을 통해 국민부담이 절감되고 행정처리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무료발급 효과, 재정 소요 등을 감안하여 소유자 본인의 인터넷 열람·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5.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오납금 통지 및 환급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현황)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오납금에 대한 명확한 환급절차 규정이 없어 환급대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직접 요구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오인받는 사례 등 민원 야기 및 행정 신뢰 저하

※ '22년 과태료 과오납 현황 : 6,159건, 2억7천여만원('23.8.~10.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개선)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과오납된 경우 발생하는 환급금 통지 및 환급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환급받을 권리 보호 및 절차상 불편 해소

 행정안전부 / 이행 중

A씨는 최근 구청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전화 한 통을 받고 깜짝 놀랐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건이 오단속으로 판명되어 과태료 4만원을 환급해 줄 테니 통장사본을 자기에게 보내달라는 것이다. 아무래도 느낌이 보이스피싱 같았다. 사실 여부를 떠나 관공서에서 전화사기로 의심될 만한 상황을 만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행정안전부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환급 관련 규정을 마련·보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오납금 환급과정에서 발생했던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과오납금 환급 누락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 소비자 불편 개선 등을 위해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을 개선합니다.

(현황) 보험가입자가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의 의료자문 심사 등 지급기준 강화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민원이 증가

※ [예시] 보험금을 받지 못한 1,000여명의 가입자들이 보험사 상대 공동소송 진행('22.10)

(개선) 과도한 수술서류 증빙 요구 등으로 인한 선의의 소비자 불편 개선 등을 위해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백내장 수술 지급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금융위원회 / 이행 완료

B씨는 지난 3월 백내장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의 의료자문 동의 요청을 거부하여 아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C씨도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 청구를 거절당했는데, 주치 의사가 안구 상태를 백내장 3단계로 진단한 반면 의료자문에서는 백내장 1단계 및 시력교정 목적 수술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주요수술 중 1위(37.2%, '21년 건강보험공단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는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불필요한 보험금 분쟁을 예방하고 억울하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선의의 소비자가 없도록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7. 카바이드 폭음기 소음을 줄이기 위한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현황) 해마다 수확기 농촌에서 사용하는 카바이드 폭음기* 소음으로 농촌 인근 주민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폭음기 소음 관련 규제 근거 부재

* 야생동물 퇴치를 위해 일정 간격(예: 30초~20분)으로 총성과 같은 폭발음을 일으키는 장치

(개선) 소음 영향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카바이드 폭음기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 일본 사례 : 소음 규제 기준을 신설하지 않고, 유해조수 퇴치기 사용자에게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관리(사용 시간·거리·요령·기준, 주민 공지 등)

 **환경부 / 이행 중**

5년 전 A씨는 OO시에서 □□마을로 이사를 왔다. 매년 봄부터 가을 추수까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20초에 한 번씩 들리는 대포 소리로 잠을 잘 수가 없다. 미나리밭에서 오리를 쫓아내기 위해서라고 한다. 폭음기 소음 스트레스 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 다시 이사해야 할지 고민이다.

정부는 소음 영향분석, 의견수렴,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카바이드 폭음기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촌 주민의 생활·수면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그간 농업인과 농촌 인근 주민 간 지속되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예비군 훈련 급식 품질을 개선하겠습니다.

(현황) 각 군은 내부 개별지침으로 비공개 관리하는 급식 규정에 따라 급식 제공 중 이나, 예비군 훈련 시 제공되는 급식의 낮은 품질에 대한 민원 지속 발생

※ 2022년 예비군 규모: 273만여 명 (2022 국방백서, 국방부)

(개선) 예비군 훈련 급식의 품질 담보를 위해 통합된 급식지원 세부기준을 마련, 공개

 **국방부 / 이행 완료**

B씨는 최근 2박 3일 예비군 동원훈련에 다녀왔다. 훈련 내내 많이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식사였다. 첫날 백숙 나온 거 말고는 3일 내내 밥 먹을 때마다 새모이 만큼 주는 건 물론 메뉴도, 맛도 최악이었다. B씨는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주린 배를 안고 훈련을 받아야 했다.

국방부는 각 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급식 규정을 통합한 급식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실 급식 문제를 방지하고 273만여 명의 모든 예비군에게 충분하고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하는 등 급식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불편(가족) 7건]

1.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현황)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현물 형태로 교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학교 주관구매제도를 통해 공동구매하여 지급**받고 있음


(개선) 지정된 판매점 **외에서** 학생과 부모들이 **교복을 구입**하더라도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금·바우처 지원방식**을 확대하는 등 **교복구입비 지원 및 학교주관 구매제도의 개선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

 **교육부 / 이행 완료**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학교에서 안내한 지정 교복 판매점을 찾았다가 교복 가격에 깜짝 놀랐다. 무상지급되는 정식교복 외에 여벌 셔츠 4만 원, 생활복 8만 원, 체육복 8만 원 등 추가 구매로 2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했다. 일반 옷가게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데다 전체적인 품질도 가격에 비해 떨어졌다.

정부는 현물 형태의 교복구입비 지원방식을 현금·바우처로 변경하는 등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교복구입비 지원방식 변경 및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복 품질 하락, 불친절, 끼워팔기, 업체 간 담합 등 그간 교복 독점 판매로 인해 제기되던 학생·학부모의 불편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14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본인인증 절차(아이핀 발급)가 한층 편리해집니다.

(현황)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다를 경우, 온라인으로는 법정대리인 여부 확인이 어려워 **아이핀 발급 불가**( 발급업체 직접 방문 필요)

* 아이핀 발급업체(신용정보회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아동의 법정대리인 확인 → 조부모(세대주)와 함께 거주시, 부모의 법정대리인 여부 확인 곤란

(개선)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연계**하여,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온라인 아이핀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 이행 중**

B씨는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도서관 회원가입을 위해 아이핀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 했으나 불가능했다. 법정대리인(부모)이 세대주인 경우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데, B씨는 사정상 부모님 집에 함께 거주하다 보니 세대주가 아이들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이다. 아이핀을 대면 발급받으려면 신용정보회사가 있는 서울까지 왕복 4시간을 들여서 가야 할 판이다.

한 신용정보회사에 따르면 22년 상반기에만 만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을 위해 직접 방문 신청한 사례가 3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대리인 확인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신용정보회사가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온라인 아이핀 발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3. 부모의 별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1인의 동의만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학교 전학서류를 간소화하겠습니다.

(현황) 자녀의 중학교 전학 시, 부모의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친권자 전체의 동의서가 요구되나, 별거 등의 사유로 비동거 중인 경우 부모 동의서 작성·제출이 곤란

(개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학에 필요한 구비서류 간소화

 교육부 / 이행 완료

A씨는 현재 남편과 별거중이고 두 아이는 A씨와 살고 있다. 아이들의 학교 전학을 위해 교육청에 갔더니 친권자 전체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혼소송 중인 아이들 아빠에게 연락해서 동의서를 요구했으나, 아직 소식이 없고 소송은 더디게 진행된다. 빨리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미안할 뿐이다.

정부는 A씨와 같은 학부모들이 겪는 고충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지침 개정을 통해 중학교 전학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학교 전학 처리가 더욱 원활히 이루어져 학생들의 적절한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를 개선하겠습니다.

(현황) 재혼가정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 및 세대주가 아닌 사람의 자녀는 '계부, 계모 및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고 있어, 재혼가정에 대한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초래

※ '22년에 재혼한 건수는 35,000건으로 전체 혼인(191,690건)의 18.3%(KOSIS)

(개선) 발급자가 '부·모/계부·계모, 자녀/배우자의 자녀' 대신 '세대주의 가족' 등 재혼 가정 여부를 알 수 없도록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행정안전부 / 이행 중

B씨는 재혼한 지 5년 차 된 엄마다. 최근 B씨 가정이 OO시로 이사하면서 아이 학교 전학을 위해 등본을 발급받았다. 그런데, 등본에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재혼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 등본을 학교에 제출하면서 위축될 아이를 생각하니 B씨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

정부는 재혼가정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의 자녀’를 “세대주의 가족”으로 표기 변경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재혼가정에서 학교 및 직장 등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함으로써 재혼 사실이 공개되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반려동물 진료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현행법상 의사와 달리 수의사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가 없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 제기

※ [참고] 대한약사회 동물용 의약품 인식조사('22.9월) 결과, 약 96.5% 응답자가 반려 동물에게 처방·투약한 약물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

(개선)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반려동물 진료기록**(복약정보 포함) **열람을 허용** 하고, 소송 등 필요시 **사본 발급도** 가능토록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 이행 중**

A씨가 키우던 강아지가 아파 인근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 A씨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진료내역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동물병원에서는 수의사법에 따라 진료기록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전국 약 313만 가구('21.10월, 통계청)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관련한 인프라도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동물병원의 진료와 관련한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공개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반려동물이 어떤 치료를 받았고, 어떤 약을 먹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동물진료업 품질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동물병원에 대한 신뢰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6. 일부 국립공원부터 반려동물 동반 입장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현황) 국립공원 출입시 공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 보조견 제외),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금지

* 반려동물을 전용 가방에 넣어 운반하는 경우까지 포함

(개선) 반려동물 유기·유실 방지, 비반려인 불편 최소화 등 방안 마련 후 국립공원 내 생태계 영향이 적은 **일부 구간을 선정하여 동반 입장 시범사업 실시**

 **환경부 / 이행 중**

B씨는 약 1.5kg의 작은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가끔 국립공원 명승지로 가족 여행을 하게 될 때 입구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막는 바람에 난감했던 적이 많았다. 무작정 자동차에 남겨 둘 수도 없고, 주위에 임시로 맡겨 둘 장소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가족 중 한 명이 남아 강아지를 돌보거나 모두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5%에 이르는 313만 가구(통계청, '21.10)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반려견 등록률이 71.5%이고 반려동물 양육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국립공원 중 생태계 영향이 적은 일부 구간을 선정하여 반려동물 동반 입장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추후 확대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7. 다자녀 가족이 투숙 가능한 숙박시설 목록을 공개하겠습니다.

(현황) 5명 이상의 다자녀 가족은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하거나, 2~3인용 객실 2개를 예약해야 해, 여행지 숙소 이용에 큰 불편

※ 미성년 자녀가 있는 5인 이상 다자녀 가구 : 455,911가구('22년, KOSIS)

(개선) 가족호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다자녀 가족이 투숙할 수 있는 객실 타입*과 객실 수를 한국호텔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

* 5인 가족(부모+자녀 3인)이 1객실에서 투숙가능한 객실 타입

 문화체육관광부 / 이행 완료

초등학생 자녀 3명을 키우고 있는 B씨는 돌아오는 휴가철에 맞춰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세 아이로 인해 숙박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다자녀 가족이 숙박 가능한 호텔이 많지도 않고, 대부분 숙박 가능 인원이 최대 4인이라 2개 객실을 예약해야 한다. 숙소 때문에 여행지 선택이 쉽지 않다.

정부는 한국호텔업협회와 협업하여 다자녀 가족이 1개 객실에 같이 투숙할 수 있는 다자녀 친화 호텔 목록을 조사하고 한국호텔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46만여 다자녀 가족도 더욱 편리하게 여행지 숙소를 결정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 7건]

1. 전동킥보드 면허인증·속도제한 등 안전조치를 조속히 제도화 하겠습니다.

(현황)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등록, 안전교육 의무화, 보험가입 등 전동킥보드 사고를 방지하고 실효성있는 관리·감독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

※ [참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2년 만에 288% 급증('19년 447건 → '21년 1,735건)

(개선) 대여업체에 운전면허 확인 등 안전수칙 협조 요청,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과 병행하여, 조속한 전동킥보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노력 강화

* [주요내용]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록제, 이용자 준수사항, 보험가입 의무화, 무면허 대여 금지, 초·중·고 등에서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국토교통부 / 이행 중

최근 전동킥보드 1대에 안전모를 쓰지 않은 학생 3명이 올라탄 채 무단횡단 하다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보호 장구 미착용 등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관리 감독 규제 체계가 미흡해 관련 사고와 불법행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하며, 정부는 조속한 입법에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 ‘도로 위 흉기’ 판스프링 불법 개조를 근절하겠습니다.

(현황) 대형 화물 적재를 위해 화물차 측면에 불법 부착한 판스프링이 주행 중 빠질 경우, 후행 차량과 충돌해 자칫 인명 피해 및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

* 불법 판스프링 부착 단속 추이: ('21년) 148대 → ('22.8월) 499대

(개선) 불법 판스프링 부착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국토부·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요지점 집중 현장단속 실시**

※ 불법 판스프링 부착금지 의무 및 위반 운전자 처벌 등을 포함한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국토교통부 / 이행 중**

B씨는 지난 2월 OO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주행 중 앞선 1톤 화물차에서 판스프링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낙하하여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자칫하다가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국민 안전, 운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불법 판스프링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화물 고정도구 이탈방지 조치 의무화, 의무 위반시 화물운송자격 취소 및 형사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속도로(IC, 휴게소, 졸음쉼터) 및 국도(과적검문소)에서 불법 판스프링 부착, 적재불량 등을 근절하기 위한 집중 현장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높ی겠습니다.

(현황) 전통시장 화재 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화재안전점검 결과 동일사항 반복 지적, 개선 이행을 저조 등 **전통시장 화재 안전 관련 사업의 사후관리 미흡**

※ '17년~'21년 중 전통시장 화재 피해액 약 840억원(화재 통계연감)

(개선)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노후전선 정비 등 **화재 안전 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취약 지역에 점검역량을 집중**하는 등 **‘사업 - 점검 결과’ 간 연계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등 / 이행 중**

지난 2월 저녁 XX시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276개 점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8개 점포가 잿더미가 됐다. XX시장은 지난해 □□시에서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화재예방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사업을 마친 상태였음에도 이번 화재를 완벽히 막아내지 못해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화재예방사업 등과 보다 긴밀히 연계하고, 각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화재예방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것이다.

4. 안전한 보행을 위해 전기자동차 음향발생장치 장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황)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엔진소리 등 주행 중 소음이 거의 없어 주택가 골목 등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그 접근을 인지하지 못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

※ 전기차 누적등록 현황 : ('21년) 231,443대 → ('22년) 389,855대, 68.4% ↑ (국토교통부)

(개선) 의무 장착 대상이 아닌 전기자동차('20.7.1. 이전 제작)에 대해서도 음향발생장치를 자발적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캠페인 홍보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추진

※ 현재 '20.7.1. 이후 제작되는 저소음자동차는 경고음발생장치 의무설치(자동차규칙 제53조의3)

 국토교통부 / 이행 중

직장인 B씨는 점심시간 음식점이 모여있는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같이 걷던 친구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자동차에 부딪힐 뻔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전기자동차가 뒤에서 바짝 쫓아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20.7.1. 이전에 제작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음향발생장치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골목길이나 좁은 도로를 걸을 때 전기자동차의 접근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었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심 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헌혈 실적을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현황) 대한적십자사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거리두기, 한파, 단체헌혈 회피 등으로 헌혈량이 급감하고 있어 원활한 혈액 수급 곤란

* 헌혈 실적(대한적십자사): ('15년) 308만건 → ('21년) 260만건

※ [참고]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23.3월 혈액 보유량은 4.2일분으로, 5일분 미만 '관심' 단계, O형 혈액은 2.6일로 '주의' 단계에 해당

(개선) 헌혈증을 제시한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교육 대상자에 대해 교육훈련 이수 실적(예: 1시간)으로 인정하여 자발적 헌혈 참여 촉진

※ 예비군 : 약 273만명(국방부) / 민방위 : 약 342만명(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 이행 중

A씨의 어머니는 지난달 관절 수술을 받다가 피를 많이 흘려 수술 중 혼수상태에 빠졌다. 병원 측은 급히 수혈을 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했지만, 혈액이 부족해 충분한 수혈을 하지 못했다. 부랴부랴 주위를 수소문해 헌혈증을 구해왔지만, 다른 병원에서도 바뀌줄 피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2023년 혈액 수요는 일평균 5,482유닛인데 비해 공급은 5,407유닛('23년 헌혈 인구 추계, 대한적십자사)로 추산되어, 혈액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615만여 명이다.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교육 대상자들에게 헌혈 참여시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청·장년층의 자발적 헌혈 참여를 촉진하고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6. 차량신호등 녹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를 시범 설치·운영합니다.

(현황)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와 달리,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없음

※ [참고] 보행신호등의 경우 ‘보행자에게 남은 보행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선) 교차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 시범 설치·운영 후 확대 여부 검토

 경찰청 / 이행 중

B씨는 네거리에서 녹색 신호등을 받고 직진하는 중에 남은 시간을 몰라 급히 통과하려다가 다음 신호를 받은 차량과 충돌할 뻔했다. 보행신호등처럼 남은 시간을 표시해주면 예측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여유 있게 통과할 수 있을 텐데, 차량신호등은 남은 시간을 알려주지 않아 사고 예방에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정부는 전문가 그룹 논의 등을 거쳐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설치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7.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황) 횡단보도가 교차로와 근접하게 설치되어 있어 차량 우회전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빠르게 이동하는 보행자와 자전거 등으로 교차로에서 사고 위험성 상존

※ '21년 교차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 99,545건(도로교통공단)

(개선) 개별 교차로 신호체계, 보행자 동선 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위치 조정 (예: 후방·전방 5m 이동)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동시 보행신호 도입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

 경찰청 / 이행 중

지난 9월경 OO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우회전하는 버스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11월경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했다. 횡단보도가 교차로 코너 부근에 바로 붙어있어, 운전자 시야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 원인이었다.

정부는 교차로 사고위험이 큰 지점에 대해 대대적인 횡단보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컨대, 실태조사·기술검토 등을 거쳐 횡단보도 위치를 후방 또는 전방으로 조정한다. 또한,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을 통해 직선뿐 아니라 대각선으로도 길을 건널 수 있게 하여 인근 모든 차량의 운행·정지 시점이 통일될 경우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알권리 8건]

1. 법인명의 회원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현황) 법인 명의 선박·골프·콘도 회원권 등 고가의 회원권이 사주 일가의 전유물로 부적정하게 사용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

(개선) ▲법인세 신고 시 업무 무관 자산 취득·사용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 ▲취득가액, 사적사용 빈도,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분석을 통해 혐의사업자 추출, ▲혐의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지속 강화 등 세원관리를 강화

 국세청 / 이행 중

OO법인 대표 A씨는 법인 명의로 5억 원짜리 고가 스포츠카와 2억 원 상당의 호텔 회원권을 구입한 후 본인과 가족들만 단독으로 이용하다 국세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정부는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 법인의 세무상 비용에 계상되지 않도록 법인 대상 안내 내용을 구체화하고, 혐의사업자를 추출하며, 법인세 성실신고 유도하는 등 세원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골프장·콘도 등 법인 명의 회원권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업무추진비 등으로 처리하는 편법을 적극적으로 차단하여 위법한 세무 처리로 인한 탈세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특정기업 위주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현황)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불명확한 기준에 의한 중복 지원 또는 관리 부실 등으로 일부 기업의 목적 외 사용 문제 등 발생

* 중소기업육성자금 : 경영안정·시설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

(개선)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심사기준 강화를 통한 중복지원 제한, 목적 외 사용 기업 대상 일정기간 지원 금지 등 지원·운영과정에서의 부조리 개선 추진

 지자체 / 이행 중

2018년 B기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OO도에서 19억여 원의 융자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자부담금 5억여 원을 더한 24억 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신축하였다. 하지만, B기업은 이듬해 신축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대신 C업체 등과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하여 신축한 공장을 다른 업체에 임대함으로써 B기업은 연 3.4억 원의 사익을 취하였다.

정부는 이처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데 악용하지 못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선해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자금이 절실한 다수의 기업을 위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3. 국립대학교 학생지도비 투명성을 높이고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현황) 국립대학교 교직원(5만 5천여명)에게 학생지도 명목으로 '학생지도비'를 지급, 부당수급 논란('21.4월)으로 '22.1월 제도를 개선*한 바 있으나 당시 학생지도 업무는 교직원의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 학생참여 의무화, 학생지도영역 지급대상 축소, 점검체계 마련, 삼진아웃제 적용 등

(개선) 부당수급 발생 등의 사례 방지를 포함한 관련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학생지도비 지급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교육부 / 이행 중**

OO대 교직원 199명은 출장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같은 날 동일 시간에 학생 지도를 했으며 총 390건의 실적을 허위 제출하여 6천4백여만 원을 받았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OO대 교직원의 학생지도비 부정수급액은 4억9천만원이 넘었다. 학생들은 등록금이 학생지도비 부정수급으로 새어 나갔다는 사실에 분개하며 해당 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현 제도 내에서 지급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지도비 부당수급을 방지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학생지도비가 학생들에 대한 명확한 지도실적 없이 교직원들의 쌈짓돈으로 부실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4. 게임물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과도한 등급분류 규제 등을 합리화하겠습니다.

(현황)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사를 둘러싸고, 등급분류 기준·절차의 자의성 및 불투명성 등으로 게임 이용자의 민원 폭증

※ (예) '22.10월, OO게임에 대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재분류시 약 4.3만건 민원 제기

(개선) ▲회의록 공개 등* 등급분류 절차 투명화 ▲변화된 사회 인식을 반영해 등급분류 기준 합리화 ▲중소·인디 게임개발사에 대한 심의수수료 감면 확대 등 추진

* 등급분류 및 직권 등급 재분류 등을 누리집에 전부 공개

 **문화체육관광부 / 이행 완료**

게임업체를 경영하는 B씨는 자사 OO게임에 대해 게임위로부터 리소스 수정 및 연령 등급 상향을 권고받았다. 이미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을 어떤 기준에서 등급을 재분류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권고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정부는 게임물의 선정성, 폭력성 등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에 맞춰 등급분류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급분류심사에 대한 게임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심의수수료 감면 비율도 30%→50%로 확대할 방침이다. 등급심사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1,170개에 달하는 중소 게임업체('21년, 대한민국 게임백서)들의 심의 부담이 줄어 우리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5. 기업 채용공고시 근로조건 등의 공개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현황) 임금 등은 입사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임에도, 채용공고에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취업준비생의 알권리 저해

(개선) 구직자의 응시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임금 등 근로조건 ▲업무내용 등의 정보가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 자율공개 유도

 고용노동부 / 이행 중

6년 동안 취업을 준비했던 A씨는 드디어 지난달 합격통지를 받고 첫 출근을 했다. 그런데 채용공고에는 임금이 ‘내부 규정에 따름’이라고 적혀있었기 때문에 출근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정확한 연봉을 알게 되었다. 취업을 위해 투자한 시간, 노력,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정부는 기업들이 임금 등 근로조건, 업무내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직자들에게 알리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자신이 지원하는 회사의 근로조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이’ 취업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가 보장되는 공정채용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기준을 마련합니다.

(현황) 공무원 채용시 면접시험은 합격 여부만 공개됨에 따라, 응시생의 알권리가 침해 되고 면접의 공정성·신뢰성 저하 등의 문제 제기

* 현재 면접은 공무원 정신자세 등 5개 항목에 각 면접위원이 상·중·하/ 점수로 평정

(개선)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구체적인 면접점수 공개 적용기준 마련

 행정안전부 / 이행 중

B씨는 1명을 선발하는 ○○직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서 3명의 합격자 중 1등을 차지했다. 그러나 면접에서 과락을 맞아 최종 탈락했다. 결과를 수궁할 수 없었던 B씨는 면접점수 공개를 요청하였지만, 면접점수는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공무원 면접시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그간 빈번하게 발생했던 면접시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과 의혹이 해소될 뿐 아니라, 한해 16만 명에 달하는 시험 응시생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시험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7. 미용사 등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를 확대합니다.

(현황) 미용사 등 국가자격시험 실기시험은 여러 항목별(세부 과목별)로 시험을 보더라도 총점만 공개하고 **항목별 점수는 비공개**

※ [예시] 미용사 실기시험은 ‘미용실무’ 1개 과목이나, 실제로는 두피·모발 관리 등 10개 세부 항목별로 검정

(개선) 수험자가 자신의 보완 필요분야 등을 알 수 있도록 실기시험 항목별 ▲수험자 백분위 ▲합격자 평균 점수 등 결과 공개 확대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 이행 완료**

A씨는 미용사 자격실기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했는데, 불합격한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했다. 미용사 실기시험에서 검정은 미용업 안전위생 관리, 두피·모발 관리 등 10개 세부 항목별로 이루어지나, 채점 결과는 총점만 공개되고 있다. 합격률이 저조하다는 말만 들리고, 다음 시험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했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항목별로 수험자 백분위, 합격자 평균 점수 등 결과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미용사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시험으로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도전하는 많은 수험생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의무경찰 국가유공자도 국군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현황) 현역 복무가 아닌 **의무경찰**(전환 복무 예비역) **국가유공자**는 국군복지시설 이용시 제한을 받음(예: 군 마트 이용 가능, **군 휴양시설 이용 불가**)

(개선)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군 휴양시설 등 국군복지시설 이용자 범위에 **의무경찰 출신 전환 복무 예비역 국가유공자**도 포함

 **국방부 / 이행 완료**

B씨는 의무경찰로 군 복무를 하였던 국가유공자이다. 국방부는 군인의 생활 안정과 군 사기 진작을 위해 국군복지시설을 운영하지만, 정작 B씨는 현역 복무가 아닌 전환 복무 예비역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제한적으로만 국군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했다.

군 휴양시설 등 국군복지시설 이용자 범위가 의무경찰(전환 복무) 예비역 국가유공자까지 확대될 경우, 전환 복무 여부에 상관없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라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